국회의원엔 '포기하고 싶지 않은 특권'

대선공약·여론 압박에도 모르쇠 일관

다시 불붙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 ⊡ 기득권에 막힌 20년

1991년 지방자치 부활때부터 논란… 새누리 최고위서 '제동'·민주당은 '뒷짐'

지난해 18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라며 모두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면서 또 다시 정치권에서 공론화 됐다.

여야 후보들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대선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새 정치 바람'과 맞물려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고, 기초단체장들도 정당공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의 기득권에 막혀 막상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20여년간 논란=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당시 정당공천 문제 탓에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연기되기도 했다.

이후 1995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반면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타협안이 도출돼 시행됐다.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은 지난 2006년부터 허용됐다.

이후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가 줄곧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왔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정당공천 폐지와 자치구 의회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9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궐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려 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제동을 건 이유는 "정당이 가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선거법 개정안에는 동의하지만, 적극적이지 않고 한발 뒤로 물러서 있다.

◇법 개정, 국회의원 의지에 달려=중앙당의 공천 폐지를 위해선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를 위해서는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대주장이 적지 않고, 민주당도 소극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여야가 법안 개정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특권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기득권에 막혀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반면, 국민과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 절반이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전국 230개 단체장 가운데 85%가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124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51.2%가 '공천권을 두고 각종 폐해가 심각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8.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20.7%는 '정당정치에 입각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 같은 국민여론과 달리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에 매달려 또 다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한호(광주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여야가 대선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국민의 불신과 냉소는 더 커질 것"이라며 "여야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보훈청 천안함 3주기 추모식

광주지방보훈청은 천안함 피격사건 3주기인 26일 북구 중흥동 안보회관에서 광주·전남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6·25 참전용사들이 전사자들에게 헌화한 뒤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광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34개 도시에서 추모식이 거행됐으며, 천안함 전사자 출신학교 45곳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간 산단 개발 손본다

정부, 올 연말까지 현실에 맞게 법·제도 개선 나서

국토연구원 용역 착수

정부가 잇따른 비리로 얼룩진 지역 민간 산업단지 조성 사업〈광주일보 20일자 1·2·3면〉을 손 본다. 지자체의 무리한 산단 개발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산단 개발 이익이 현실과 맞지 않아 참여 기업도 없어 정부가 법 개정 등을 통해 산단 조성 제도를 개선한다.

2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민간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찾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해 올 연말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꾼다.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민간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분양이 안 될 경우 지자체가 보증을 서주고 있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은 지자체 건의와 참여 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게 되며,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무분별한 산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하기도 하는 등 지역 산단의 실정과 요구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산단 개발 업체의 이윤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산단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15%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지침에는 6%로 규정돼 전남지역은 6%만 인정돼 참여 업체 찾기가 힘들다.

다른 지역은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15%까지 이윤을 보장하고 있지만 전남은 조례가 없어 통합지침에 따른 6%만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차라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과도한 규제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 업체의 업종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단 입주 업체를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전자, 세분류 TV 식으로 적용하다 보니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산단 개발과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감면되는데 취득세에 따른 농특세가 부과되고 있고, 산단 내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안전행정부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사업의 투·융자심사를 반려하고, 담양 일반산단 조성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먼저 설립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동함평 산단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이어서 정부 투·융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고, 담양 산단은 'SPC 설립과 산단 지정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동함평 산단은 민자 550억원, 군비 77억원, 국비 83억원 등 총 7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이어 투융자 심사마저 반려돼 차질을 빚게 됐다.

또 민자 514억원, 국비 247억원, 군비 39억원 등 800억원이 투입되는 담양 산단도 민자 유치를 위한 SPC 설립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남도는 "동함평 산단의 경우 군비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투융자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안전행정부에 다시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작, 당사자들은 조용하군

"농림축산·해양수산 호남 소외론 경청해야"

민주당, 청와대에 촉구

민주통합당은 26일 박근혜 정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차관급 인사에서 농도(農道)이자 해양수산 1번지인 전남을 비롯한 호남인사들이 철저히 배제〈광주일보 26일자 3면〉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은 호남인사 소외론을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차관과 외청장에 이르기까지 호남 출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역대 정권은 농도(農道) 호남을 의식해 관련 부처만큼은 호남을 배려해 왔으나 박근혜 정권은 이마저 깡그리 무시했다"며 "호남지역 농축산어민들은 민원서류를 들고 누구를 찾아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FTA에 이어 한중 FTA가 체결될 것이라는 소문에 우리 농어촌은 민심이 흉흉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통령선거 때 우리 농민들과 축산어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공약에서 홀대당했다"며 "도대체 박근혜 정권의 인사는 누가 했으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고위공직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내고 "성접대 등장인물들이 호남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런 루머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5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